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전략

양진건\*

## 1

현재 제주지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제주도의 물적 시설,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 문화 등의 지역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계획이기 때문이다.

상기 계획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지식화 등 21세기 국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여전히 기존의 도시계획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종합계획은 특정단지 조성 등의 토지개발과 도로·공항·항만 등의 SOC 기반시설 구축 등 h/w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s/w 위주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인적자원 - 사람과 지식 -에 있다고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공급·배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이에 기초한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이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제주도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란 정책적 특성에 잘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교육환경 및 작업환경으로서의 쾌적성(amenity)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쾌적성을 토대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내외의 지식을 수집 및 전파하고 동시에 새롭게 창조해 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의 지식자본의 육성과 교류의 hub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 2-1.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그렇다면 왜 인적자원개발(HRD)인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은 경쟁적 우위를 가져오는 새로운 전략 무기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나 지식의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성장에 공헌하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산현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식은 사장될 수도 확산될 수도 있다. 학습은 신기술 혁신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에서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학습경제에서는 조직과 개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innovation)할 것을 요구한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일찍이 노나까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이 암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tacit knowledge)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형식지(formal knowledge)로 변환되었을 때 지식 창출의 모티브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그 모티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해답은 학습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식과 학습의 차이점은 지식은 상품이나 재산

과 같이 고정된 자원(stock)이다. 반면 학습은 순환하는 자원(flow)이며 과정(process)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단순한 보급이나 누적(예컨대, 자료, 매뉴얼의 집적 등)보다는 지식들 간의 연결, 확산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예컨대, 특허출원, R&D 등)을 요구한다. 즉, 지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경제 및 학습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의 생산과 분배는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OECD, 1996). 이는 경제성장, 고용변화 및 복지 수준에 영향을 주게되며 그 구성요소인 조직(기업, 교육조직, R&D 기관 및 정부조직 등)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은 경제적 수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Lundvall and Johnson, 1994).

학습경제로 발달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나 생산성의 증진 뿐 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해야 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유형 및 직업의 본질에 영향을 준다. 결국 이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교육시스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풀뿌리(grass roots)로서 급변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개인과 조직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혁신체제는 일차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생산의 전문성, R&D 투자, 조직 및 제도 개혁, 법제도, 규범 및 가치의 차이에서 국가들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가 R&D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 국가 혁신체제(national systems)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역체제(regional systems)들 간의 차이가 있다.

지역혁신체제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과 부의 수준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경제성장에 관한 글로벌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연구는 EU 국가들 간에 생산성과 수입에서의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Cappelen et al., 1999). 이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혁신능력과 개인

및 조직 학습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인인 상호학습능력은 그 지역의 기업들과 다른 조직들이 거리상으로 얼마나 근접해있는지, 즉 공간근접성(spatial proximity)에 어느 정도 기인하지만, 최근 연구는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이 ICT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근접성(organisational proximity)은 지식 공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식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의 생산체제나 지역노동시장의 조직과 기능을 핵심적인 지식들이나 노하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은 학습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공급처이며, 그 지식은 거래될 수 없는 요소(untraded elements)이다(Storper, 1995).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형태의 지식들은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인이다.

지역의 독특한 형태의 지식들은 지역 특유의 제도, 사회적 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 속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 가치 및 신념체계이며,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Woolcock, 1998). 물론, 사회적 자본은 전체 사회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출발한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간의 차이 그리고 더 하위 수준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의 궤적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인간자본(human capital)의 생성은 적절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확장된다(Coleman, 1988). 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환경에서 만이 교육 성취에 대한 기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경제발전에 사회적 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의 경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구속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경제나 사회를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하는 해왔던 경제, 사회적 행위들(규범, 가치 및 신념들)이 무의식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나 혁신을 위한 요구에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은

지역의 저 성장, 고용 감소, 수입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은 기존 지식의 틀 속에 제한되고, 새로운 혁신의 기회나 지식의 원천에 대한 지각이 봉쇄된다. 즉, 비학습(unlearning)이 나타나게 된다(Grabher, 1993).

국가경쟁력 증진의 시각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은 불균등한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Bourdieu, 1986). 특히, 지역격차, 편견,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및 계층간의 격차(교육기회, 정보, 경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국민 전체의 시너지와 협동, 사회적 응집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단위 지역 사회(community)에 그 의미를 국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불균등을 야기하는 개인, 지역사회전체,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가치로운 협동적 자산(collective asset)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다.

학습하는 지역사회(learning region)의 진정한 중요성은 바로 이점에 있다. 지역체제 혁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기능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학습 습관과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지역, 학습하는 도시(learning cities) 건설 모형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나 도구가 될 것이다.

## 2-2. 지역개발과 학습

지식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인적자원 양성 및 정착은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다. 그러나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각종 사업이 정부 각 부처(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과기부 등)의 주관 하에 추진되었으나 일관적·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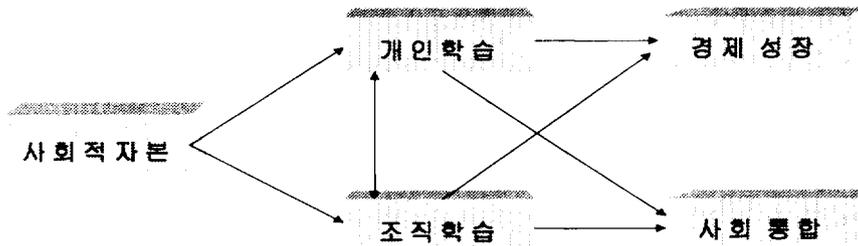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 정책은 불균등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재생산하며 지역격차, 편견,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및 계층간의 격차(교육기회, 정보, 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는 우수인력의 도시집중을 유발하고 학벌위주의 태도를 강화하여 직업세계와 학교와의 괴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산업발전을 전망하여 지역별 필요 인력을 전망하고 양성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양성·활용 및 개인차원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잠재능력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 및 각종 지역분산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 위주나 물리적 자원에 대한 지원 만 있다면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간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인간자본에 대한 고려는 이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OECD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개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그림 1〉 지역 분석을 위한 개념 모형(OECD, 2001)

OECD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이차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던 교육, 학습, 인간 자본 및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들을 일차적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그 지역의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우리가 RHRD를 통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원천은 그 지역에서 발전되어온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전통과 문화를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지역개발의 성공 요소(KFS: Key for success)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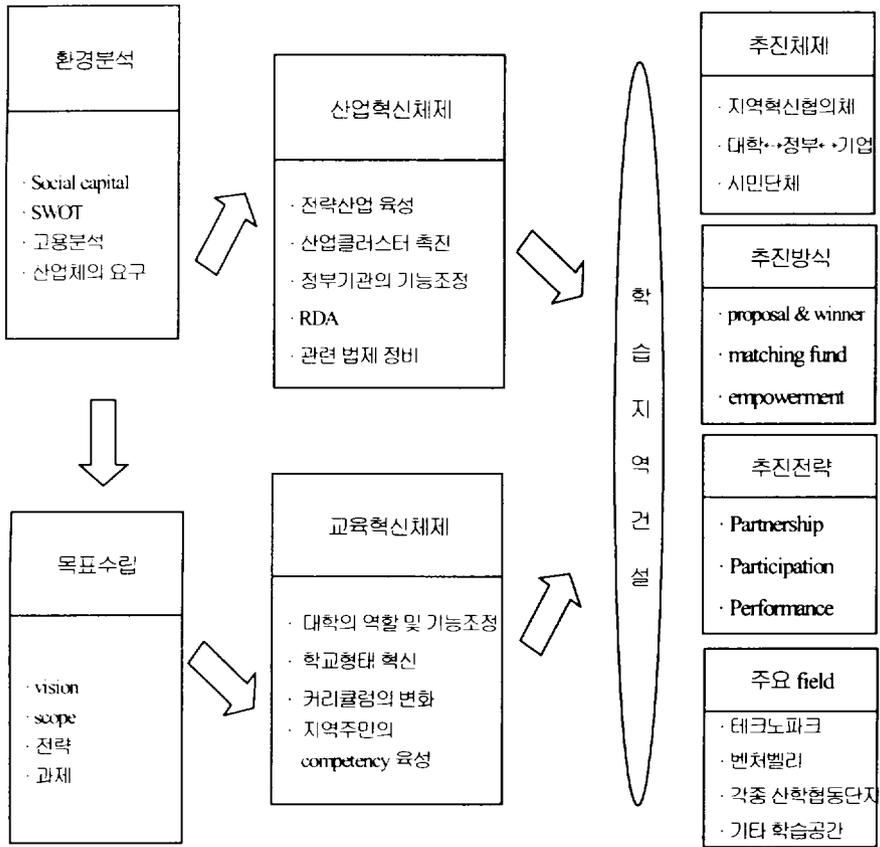
이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학습이다. 따라서 지역내 혹은 지역간의 모든 학습과정은 사회적 자본에 터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작용하는 매개 변인이다. 지식의 보급과 창출과정에서 개인학습은 학교, 가정, 일터 그리고 대학 연구를 통해 달성된다. 조직학습 역시 지식의 보급과 창출 과정을 수반하는데 이는 개인들 간에서 나타나는 협의의 학습활동 뿐만 아니라 자료, 매뉴얼 집적, 자격제도, 각종 R&D 활동 및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장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 2-3.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역의 산업혁신체제와 개인 및 조직의 학습활동의 증진은 별개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산업혁신을 위하여 먼저 지역은 환경분석을 통하여 산업발전의 비전을 정립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지역간의 산업안배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선택과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기관(산자부, 과기부, 중기청 등)들의 중복된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지원 등은 산업클러스터로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산업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과 기능들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지역혁신협의체(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산업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산업혁신체제 구축과 더불어 교육혁신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혁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격이나 역할 및 기능이 조정되어 지역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뿐 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시 지역발전의 인력 수급계획에 맞추어 변화되고 학교의 형태들이 혁신되어야 한다.



〈그림 2〉 RHRD 추진 모형

한편 직업현장과 학교 교육내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정리하여 이를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지역단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의 평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되고 국가의 공인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자격체제를 정비하고 학력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혁신체제나 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관련 법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법, 제도적 체제, 조직의 정비만으로는 지역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과 그들 간의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즉,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지역 건설 운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각 분야에서 학습활동을 고무하고 의식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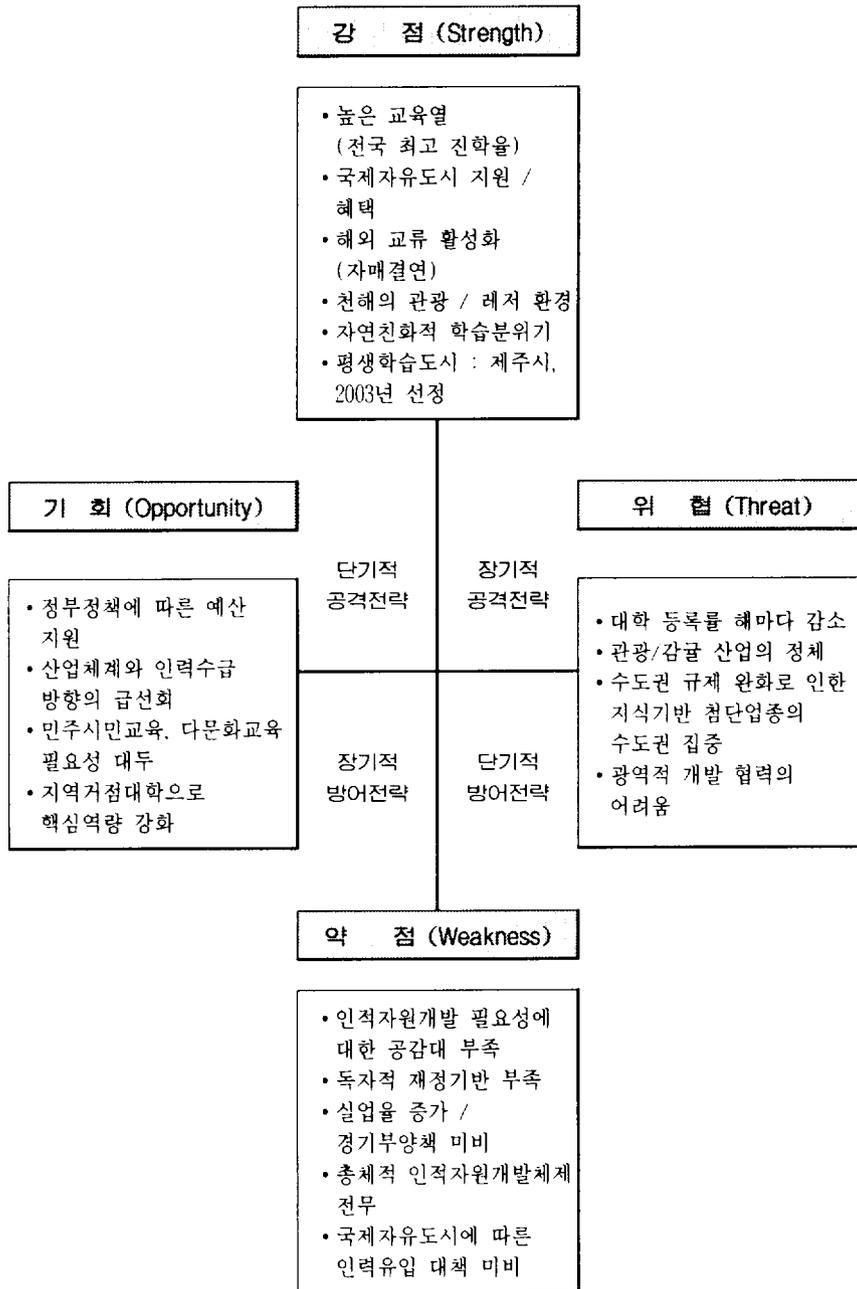
#### 3-1. 제주도 인적자원개발의 동향

제주도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수준의 총체적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인재유치·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며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산재되어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어려운 정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경우 지금까지는 경제적·양적 관점에 치우친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청 수준의 학교교육 위주의 단기적이고 양적인 인력수급계획에만 전념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삶의 질 향상, 일·학습·여가의 조화 등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요구에 자치단체의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제주지역의 천혜환경의 조건을 살린다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교육중시문화가 강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로서는 지식산업을 통한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주지역 인적자원 SWOT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제주지역 인적자원 SWOT 분석

### 3-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인적자원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2002년 1월 확정,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2003년 2월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리고 2004년 7월에 확정된 「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3개의 공식 문건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의 문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공급·배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이에 기초, 제주도를 Learning Island Jeju로 만들려는 평생학습적 종합계획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5년 3월까지 제주도에서는 총체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아래 제21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제22조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제2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2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4조의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의 특례, 제25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육성> 사업으로 “국제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외국어 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규제자유지역 지정”, “교육기관 특성화 유도”, “국제화 전문교육기관 육성”,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및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으로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외국어교육 및 연수강화”, “교육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와 교육환경 개선”,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의식교육 강화”, “평생직업교육 체계구축과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 “지식기반화를 주도하는 지역대학 육성”,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는 <제3장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력 양성·확보> 아래 제1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육성, 제2절 지방대학 졸업자의 고용촉진,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정착지원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동북아 중심 국가 및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과 세계수준의 우수 교육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제주도를 동북아의 지식 중심(knowledge hub)으로 만들겠다는 추진 배경과 총론에는 공감을 하지만 각론에 대하여는 균형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개방화, 국제화, 항구·통신·금융·무역 인프라, 영어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교육기관 유치라는 것이 기존의 잘 갖추어진 인프라에 하나 추가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이러한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기본 인프라와 영어,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단계적, 점진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다국적기업지역본부 유치와 여기에서 일할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해 Top 10 대학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의 예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경우는 다국적기업본부 유치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며 첨단산업 및 다국적 기업 유인가가 약하므로 단순히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넘어서 양성된 인재가 일할 다국적기업과 세계 굴지의 대학을 유치하는 양동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개발 7대선도 프로젝트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11년까지 개발, 약 50여개 업체를 입주시키려는 계획과 함께 조지 워싱턴대학교의 제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캐나다 밴쿠버 씨리 교육청의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을 위한 의향서 제출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예정대로 외국교육기관들이 설립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IT관련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과 BT관련 생물화학, 정밀화학 산업이 입주하여 관련 연구소들이 집중 배치되고 다국적기업들이 유치된다면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지 워싱턴대학교의 제주 캠퍼스 설립이 2005년에 들어 탄력을 받으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문 시카고 경영대학원이 아시아 분교 후보지로 동경, 서울, 홍콩, 상하이 등을 검토하였으나 어느 도시 보다도 공향이 가깝고, 안전하며,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싱가포르를 최종 선

택했었다. 제주도가 과연 조지 워싱턴대학교 아시아 분교 최종후보지가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캠퍼스 부지로 남주군 소유의 대정읍 구역리 일대 1백15만평과 기타 인센티브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조지 워싱턴대학교 측은 산·학·연 기지 구축을 위한 제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캠퍼스 타운 조성,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과 고용 창출 및 수익증대 실현 노력, 외국어 교육기관,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등의 단계적 설립, 최초 등록학생을 1천5백명 규모에서 5년 후 5천명 확대, 제주도 특성을 감안한 제주 캠퍼스의 관광교육 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이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믿음을 제고시켜 외자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03년 1월 심의, 의결됨에 따라 외국대학 유치 가능성이 되면서 제주고등교육시장에는 이미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위시로 외국대학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지 워싱턴대학교와 같은 유명 교육기관을 직접 유치함으로써 그 명성에서 오는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그리고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고 또한 선진 교육 및 운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자본지원, 교원 및 학생 유치의 용이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교육사업에 실패할 경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80년대 일본은 한 때 외국대학 분교를 42개나 유치하였으나 지금은 단 2개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외국대학 분교의 학위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출한 대학들의 수준이 낮은데 비싼 등록금 때문에 외면을 받았던 일본에 비해 2004년 뉴스위크 인기도 조사에서도 정치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대학으로 뽑힌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수준만은 신뢰할만하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앞으로 외국대학 분교의 영리법인화, 과실송금 허용, 운영 및 경영의 자율화 등 특례가 인정되고 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제주도 차원의 대대적인 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도내 대학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더욱이 대

상 학생들이 다룰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들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되는 생존의 불안 문제도 심대해질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제주대학교의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선은 도내 대학들이 국제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대학들과 합작, 공동운영, 공동 또는 복수학위제를 조건으로 외국대학을 선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제주 캠퍼스 설립은 성사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과 지식 자본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질 높은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양질의 인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내 대학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세계적 수준의 교육 거점(hub)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90년대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이며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의 제주 조지 워싱턴대학교 캠퍼스 설립 양해 각서 체결을 계기로 우리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공세적인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제주캠퍼스 설립은 단순히 외국대학 한, 두개의 유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 발전의 청사진 위에서 그 유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우리나라 대학발전과 제주도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Impact를 줄 것인가란 예측과 상호연관성 위에 접근하는 게 순서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 네트워크 보다는 섹터리즘 면에서 접근한다는 인상이 농후하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이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믿음을 제고시켜 외자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캠퍼스 부지 1백15만 평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대학 분교의 영리법인화, 과실송금 허용, 운영 및 경영의 자율화 등 특례가 인정되고 부지 매입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제주도 차원의 대대적인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빚장을 더 열어젖히고 플러스 알파 형태의 지원을 한다는 규제완화+ 재정지원(Governance+ Finance)한다는 논리인데 이 경우 교육시장 개방정책기조와 다소 상충되고 이로 인해 역

차별 문제는 물론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장 전체가 혼탁해질 우려가 상존하므로 교육시장개방의 목표와 원칙과의 일관성 견지가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지방대학은 고사위기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대학 유치·지원에 힘쓰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외국대학 유치·지원 간에 형평성 유지가 매우 시급하다.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되는 생존의 불안 문제는 더욱 심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대학과의 합작, 공동운영, 공동 또는 복수학위제 등의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외국기업 유치 면에서 접근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문 닫게 될 경우의 문제(In/Out)에 대해서도 교육적 견지에서의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은 1980년대 외국대학 분교가 30여개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미국 템플대학과 사우스 일리노이대 등 2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실재 사례로 꼽힌다. 일본 국내선 학위인정이 안되고, 지방에만 설립하도록 하는 등 문부성의 규제 때문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일본에 들어온 대학 대부분이 현지에서도 학생 모집이 잘 안되는 대학들이었고, 명문대를 선호하는 일본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대부분 대학이 교수와 프로그램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본 측의 후원으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학생이 감소하자 스스로 철수했다. 현재 남아있는 분교 중 사우스 일리노이 대학의 경우 니가타현과 일리노이주가 공동으로 교육경제위원회를 설립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미 분교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대학에 입학하면 동시에 본교 학생으로 관리된다. 랭귀지 코스를 거치거나 대학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미국 본교 편입이 가능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8개의 사업과 35개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포괄하려다 보니 그들 개별 사업 간 이념적 지향 및 추진체계 구축에서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제교류 협력과 제주전통문화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공교육기능 강화와 교육규제자유지역 지정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

민이 부족하다.

종합계획에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문화교육을 강조했지만 몇몇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개발과 개방에 따른 전통문화의 식민화라는 지역의 운명에 관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이 확산되고 문화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외국어, 컴퓨터 및 대중문화 관련 학습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은 점점 탈지역화하고 정체성 상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죽어가는 지역공동체를 학습을 통하여 다시 살리는 학습공동체부활운동이 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인적자원개발은 은 지역성이 약화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업의 하나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다루어지다 보니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이 폭넓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주로 개인의 지식이나 기초역량과 관련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치중되고 사회적 작용의 양과 질을 형성하는 제도·관계·규범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과제의 제시는 미흡하다. 예컨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일터의 학습조직화 그리고 학습지역이나 학습도시, 지역사회교육 등에 강조를 찾기가 어렵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이 시대의 양대 자본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인큐베이터로서 인적자본을 통해서는 경제적 경쟁력과 자아실현을,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는 사회적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재생을 넘어 사회적 재생이라는 맥락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3)

「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주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립”, “직업훈련사업”, “비즈쿨사업”,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세부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제주도에선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식협의체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아래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를 두고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도청,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중소기업청,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이 모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여서 여러 가지 미

흡한 것이 사실이다.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을 포괄하는 지역 내 관련 주제들 간의 연계·협력관계가 되고 있지 못하고 다분히 구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경험은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에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NURI 사업에 대한 지역단위 심사와 지역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개최, 「제주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등의 활동이 있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비공식식협의체로는 제주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제주인적자원포럼"이 있는데 "e-learning 로드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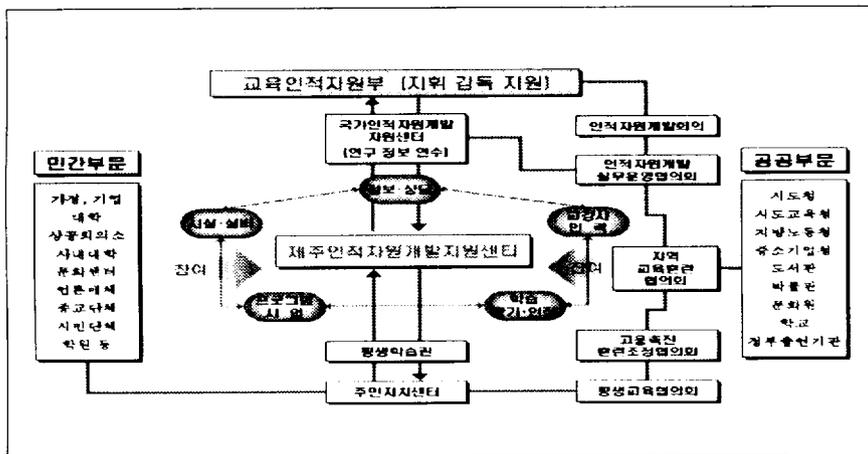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활동에 들어가는 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운영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체계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적 수준의 대응이 절실하며,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을 병행하여 지역 전체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조정을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하고, 획일화를 탈피하여 다양화된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민간 HRD, 과학기술, 문화 등을 포괄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활용과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절실하다.(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또한 RIS, RHRD,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평생학습도시, 국제자유도시를 아울러 연계하여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허브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제주 지역 6개의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단체, NGO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광범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심체로서 독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이 시급하다. 그 조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시해볼 수 있다.

○ 인적자원개발부 :

- 도내·외 사회교육, 산업교육, 특성화 교육, 관광교육 등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 산업체 인력개발 연수와 같은 시설을 구성하여 도내·외의 사회교육, 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
- 교수학습지원부 :
  - 도내·외 현직 교수 및 교사 그리고 교사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리고 티칭클리닉
- 평생직업교육부 :
  -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재취업 희망자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고령자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장애우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대안교육부 :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 방과 후 프로그램
  - 계절형 프로그램
  - 공동육아 프로그램
- 리서치텔 운영부:
  - 국내·외 우수연구진 유치를 통해 인력개발 지원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임대, 관광·레저와 연계.



〈그림 4〉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네트워크 체제

## 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넓게 볼 때 제주도를 지역학습도시(regional learning cities)로 만드는 데 있다. 지역학습도시는 학습자 스스로가 속한 지역문화환경 속에서 학습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평생학습조직을 의미한다. 지역학습도시는 학습자들 간의 고립과 독단의 벽을 넘어서는 상호연결적인 지역중심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공동체중심의 평생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별학습망을 종합, 연결, 관리할 수 있는 총괄평생학습관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체의 활성화와 각 지역 대학들의 기능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주대학교는 스스로의 성격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평생학습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평생학습공동체의 올바른 기능발휘가 우선 요구된다. 첫째로, 비영리 지역학습공동체의 경우, 영리조직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식을 필요로 한다. 비영리학습공동체는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행에 옮기는 네트워크조직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학습도시·학습지역으로서의 책무성과 평생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평생학습망으로 활동하기 용이하다.

둘째로, 지역사회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점별 평생학습망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즉,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과 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든지, 혹은 지역독서모임의 재정적 어려움은 서점과 같은 상업문화시설을 북 카페로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또, 주민세를 납부한 지역주민들에게 학습도시의 여러 학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정해진 학습지불보증표를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치정부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의 경우, 지역간 수익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서점이나 북 카페 운영자들과의 만남과 대화, 지역사회 평생학습망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공통적인 확신, 나아가 경제적 지원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만 한다.

셋째로, 지역중심의 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클리닉(learning clinic)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지역학습도시에서는 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이 하나의 학습클리닉이 되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학습(pre-learning)이나 학습의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학원의 기능변화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학원은 지금처럼 단순한 지식전달의 교육기능이나 여가선용의 학습기능을 벗어나서, 학습장애를 교정해주는 학습치료기능까지 담당하는 지역중심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지역사회주민들의 평생적능개발의 역할까지 감당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원산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결국, 학습지역·학습도시로 불리우는 지역공동체중심의 평생학습망은 모든 학습자들이 자기의 학습필요와 학습욕구에 따라 자기의 거주지역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거점별 학습'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학습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그 어디서든지 모든 지역주민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짜투리 학습'을 요구한다. 이런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와 기업체, 영리·비영리 평생학습조직 모두가 감당할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 관련부처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견조율을 담당할 총괄협의기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학습(learning)의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잠재능력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관련 기관장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및 연구·정보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기업적 차원의 교육훈련 범위를 뛰어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기초능력, 정보활용 능력, 민주시민역량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통합되면서 지역중심, 주민중심, 학습중심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전략적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제주대학교 학부에 전국 최초로 인적자원

개발학과를 조속히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A. 지역기업의 지역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참여 유도

- 1) 지역기업의 RHRD 참여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중 지원
  - 지역인력 고용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 고용보험기금 활용
    - 각종 세제 혜택
  - 지역 기업의 인력투자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 인력투자자(investors in people) 선정 및 지원
    - 기업생산성 진단 및 질 관리
    - 중앙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이를 담당
- 2) 지방대학의 지역 기업인력 직접 육성책
  - 수요자 니즈 분석에 따른 주기적 교육과정 개편
  - 기업체 조기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및 진로 알선
- 3) 지역발전 cluster에서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및 학습조직화
  - 대학과 기업의 3대 협력 사업 전개
    - Recruitment
    - Education and training
    - R & D cooperation

#### B. 지역교육기관(특히, 학교)의 노동시장 정보 활용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지역교육훈련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방노동관서 차원에서 지역단위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훈련과정 선정위원회가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노동부의 업무 연계가 거의 부재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노동시장정보 및 산학연계 차원의 진로지도 활동은 극히 미약한 실정임.

- 영국의 경우, 지역 및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단위의 훈련 기업협의회(TECs), 지역의 산학관 협력을 주도하는 지역개발협의체(RDA), 및 지역주민 역량개발과 활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학습과 기술위원회(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노동시장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활성화

- 현장 요구분석을 통해 추출된 핵심 기술의 정리 및 대학 컬리큘럼의 가이드 라인 제공
  - 현업전문가(SME), 교수,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기술 자격 평가위원회의 구성
    - 현업전문가의 학생 능력 평가, 학점 인정 참여 등 역할 강화
  - 중앙과 연계한 자격 평가·인증 및 관리
- 2) 현장 핵심기술에 기초한 주기적(장·단기)인 학교 교육과정의 갱신
- 3) 정보 분석을 통한 진로지도 및 상담 기능 확대

C. 지역혁신의 주도 세력으로서 제주대학교 육성

- 1) 제주대학교의 특성화 및 소규모 대학의 통합 유도
- 제주대학교의 3대 특성화 육성
  -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합
- 2) 지역 기술 및 지식혁신 단지 조성 유도
- 국제자유도시 7대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구축을 통한 제주대학교와 산학협동의 공간적 밀착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3) 제주대학교의 우수 교수 유치 적극 지원
- 교수의 철저한 질 관리 및 평가
  - 대학특성별로 교수평가 기준 다양화
- 4) 대학평가체제의 혁신

D.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1) 지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 2)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활용

### E. 지역 특성화 고교 육성

- 1) 관광, IT, BT 등 경쟁력 기반 산업중심 인력의 육성
- 2) 현 실업고교를 지역 특성화 고교로 단계적 개편
  - 우수인력 유치 및 취업 보장 대책 마련
- 3) 특성화 대학과 특성화 고교의 연계

### F.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 1) 교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설 활용 평가 병행

### G. 지역평생학습 운동을 지역개발전략으로 활용

- 1) 학습지역(learning regions), 학습도시(learning cities) 건설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모형 개발 및 전파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사업
  - 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활성화
  - 종합고용센터 기능 확대
  - 대학/기업/공공기관의 각종 지식·정보 및 시설 인프라의 공유 활용
- 2) 지역 평생교육 관련 법 개정 및 구체적 시안 마련

## 참고문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Cappelen, A. et al(1999). "Lack of Regional Convergence". In Fagerberg, J., et al(eds.), *The Economic Challenge for Europe: adapting to innovation-based growth*. Aldershot: Edward Elger.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fEE(1998). *Practice, Progress and Value*. London.

- Lundvall, B.A. and Johnson, B.(1994). "The Learning Economy". *Journal of Industry Studies*. 1. 23-42.
- OECD(1996). *Transitions to Learning Economies and Societies*. Paris.
-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 Storper, M.(1995). "The Resurgence of Regional Economies. Ten Years After: the region as a nexus of untraded interdependenci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 191-221.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7.